

청년세대 평화적 분노 표출... 'K-시위' 혁신 이끌어

‘1030세대’가 주도하는 탄핵집회 주제 무겁지만 활기찬 시위 주도 응원봉·대중가요, 참여 문턱 낮춰 SNS 등 ‘직접 민주주의’ 수단 활용 “나눔·돌봄의 오월정신 계승 기회”



광주 시민들이 지난 21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쟁취를 위한 7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서 '내란범죄자 윤석열, 내란세력 국민회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으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퇴진'이라는 하나의 뜻으로 모인 다양한 세대의 시민 가운데, 학생과 청년 등 1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위 문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민중가요·촛불·태극기 등 비장함으로 가득했던 과거와 달리 알록달록한 응원봉이나 최신 대중가요로 집회 현장의 문턱을 낮췄다. 자신의 주장이 강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층이 주제는 무겁지만 분위기는 활기찬 시위를 주도하면서 'K-시위'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지난 4일부터 매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 참석 중인 김세원(24)씨는 계엄 당시를 떠올리며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이 전해준 광주항쟁 이야기를 다시 경험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지 못했다. 특히 포고령 속 '처단'이라는 단어는 그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김씨는 "난생 처음 보는 단어에 '처단'이란 말을 직접 찾아보기까지 했다. 대체

적으로 독재·공산국가에서 사용하는 말이더라. 부모세대의 공포·엄혹함을 여실히 체감했다"며 "5·18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다치고 죽게 된 명분도 이 단어에 근거하지 않았을까 싶다. 과거를 사진과 영상으로 미리 배운 젊은이들에게 이번 포고령은 더욱 큰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고 말했다.

세계적 화제를 이끈 1030세대의 '탄핵 응원봉'과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 등에 대해선 변화를 바라는 젊은 층들의 바람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이번 집회를 통해 'K-민주주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고 평했다. 김씨는 "응원봉은 아이돌 팬들에게 정말 소중한 물건이다. 여기에 '탄핵' 스티

커를 붙였다는 건 그만큼 윤석열에 대한 분노, 새 시대에 대한 열망이 컸다는 뜻"이라며 "대중가요 또한 민중가요로 정형화됐던 과거 시위문화가 자연스럽게 변화된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임을 위한 행진곡'처럼 새로운 꿈·희망 등의 의미가 부여되니 세대를 아울러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 절차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

판이 꼭 인용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촛불을 넘어 신나는 K-팝과 응원봉 등 새로운 상징을 만든 이른바 'K-시위'에 오월단체와 정치권 등 각계각층도 놀라는 분위기다.

김명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1980년 시위부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시위는 '투쟁의 장'으로서 엄숙한 상황이 많았다"며 "이번 광주 'MZ 독립운동가'들의 집회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콘서트처럼 웃고 즐기는 신명난 시위지만 결국 '목적성은 같다'는 생각을 했다. 너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K-시위가 빠르게 전국화에 성공한 것은 'SNS 활성화'가 주효했다고 봤다. SNS가 실시간 공유의 기능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이를 실질적으로 관철하는 '직접 민주주의' 수단으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그는 "5·18 당시 광주는 외부와 단절된 채 '폭동'으로 조작되고 억압당했다. 많은 이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다"며 "이번 계엄 때는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비판 여론의 뜨거움이 오프라인까지 이어졌다. 여기에는 플랫폼에 익숙한 젊은 층의 역할이 컸다 '선결제 문화'를 비롯해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길을 돌린 것도 다 이들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尹, 탄핵서류 수취 거부... 헌재, 오늘 '송달 간주' 검토

후속 절차 지연...발송송달 등 방법 27일 변론준비기일 변동 없이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예

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헌재는 23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 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헌재는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

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자송달 통지가 이뤄지면 확인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3항에 따르면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고 갈 수도 있다.

헌재는 이르면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지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스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